



의안번호	제 2022 - 6호
보 고 연 월 일	2022. 3. 28. (제115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1
II.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
1. 개요	2
2. 추진 경과	2
III. 전문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3
1. 개요	3
2. 신규 위촉 대상자	3
3. 위촉장 수여식 개최	3
4. 전문위원 구성	4
IV. 제8기 전반기 수정 대상범죄 양형자료 조사 및 결과 분석	5
1. 개요	5
2. 양형자료조사 내용	5
3. 분석 내용	6
V. 제13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7
1. 개요	7
2. 회의 내용	7
3. 자문 의견 요약	7

(1) 제1안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유형 분류 방안	7
(2) 제2안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양형인자	9
(3) 제3안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존치 여부	12
(4) 제4안건: 기타 안건	13

VI.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7차 공청회 결고 보고 15

1. 공청회 개요	15
2. 사회자,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15
3. 공청회 지정토론 요지	15
4. 공청회 일반 방청객 의견 요지	19

VII.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21

1. 개요	21
2.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회신 의견 및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22
3.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에 관한 회신 의견	24

VIII.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 공개 [의결 후 절차] 25

1. 개요	25
2. 관련 규정	25
3. 공개 방법	26
4. 추진 일정	26

IX.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27

1.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분야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제안서’ .. 27
2.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30
3.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34

□ [별지1] 신임 전문위원 각 프로필 39

□ [별지2] 법원별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현황 41

□ [별지3] 죄명별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현황 43

□ [별지4]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 분야 범죄 양형기준 개선 관련 제안서」 45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전문위원 제145차 전체회의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함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 회의	제145차	2022. 3. 14.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제시된 공청회 의견, 관계기관 의견,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검토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에 대해 제시된 공청회 의견, 관계기관 의견,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검토

II.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양형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양형기준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양형기준 개선 논의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2021. 12. 6. 최종 의결된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을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 추진 경과

- 2022. 1. 27. 및 2022. 2. 7. : 홈페이지 게재 의뢰(법원행정처 전산 정보관리국)

시행일	범죄군	게재 경과
2022. 3. 1.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에 의해 그 내용이 수정된 25개 범죄군	2022. 2. 28. 게재

III. 전문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1. 개요

- 2022. 2. 16.자로 유관모 전문위원, 2022. 3. 1.자로 백광균 전문위원 각 임기만료
-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문위원 위촉

◆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제8조 (전문위원)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

2. 신규 위촉 대상자

- 최형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022. 3. 2.자)
- 김한울 대검찰청 검찰연구관(2022. 2. 17.자)

3.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일 시 : 2022. 3. 28.(월) 15: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위촉장 수여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위촉대상자 : 최형준, 김한울 전문위원

※ 신임 전문위원의 자세한 경력은 [별지 1]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기재와 같음

4. 전문위원 구성

[2022. 3. 2. 기준]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최초위촉일
법원	최승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등법원 판사	2019. 2. 27.
	이재신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2021. 2. 22.
	최형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22. 3. 2.
검찰	최재아	대검찰청 양형정책관	부장검사	2021. 7. 5.
	김한울	대검찰청 검찰연구원	검사	2022. 2. 17.
변호사/ 군법무관	김희연	김희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7. 3. 7.
	최익구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2021. 8. 17.
	김형찬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군법무관	2022. 1. 24.
교수/ 전문가	한상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 5. 16.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2015. 5. 16.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 8. 20.
	박성훈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정보·통계 연구센터장	2019. 9. 9.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 7. 5.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1. 7. 5.

IV. 제8기 전반기 수정 대상범죄 양형자료 조사 및 결과분석

1. 개요

- 제8기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인 성범죄에 대하여 양형자료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양형기준 수정안 연구 시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자료를 제공
 - 범죄유형의 세분화, 범죄유형별 기준형량,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 추출, 양형인자별 가중치 등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통계자료 추출
- 2021. 11. 8.부터 2021. 12. 10.까지 양형자료조사를 실시함

2. 양형자료조사 내용

(1) 조사 대상범죄

- 제8기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인 성범죄에 대하여 전국 법원에서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선고된 사건
- 조사 대상 건수 : 5,886건(군사법원 521건 포함) 중 5,791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사유를 제외한 최종 대상사건은 5,520건임(세부 죄명별로 단일범 및 동종경합범 추출)

(2) 조사기간

- 2021. 11. 8.(월) ~ 12. 10.(금)

(3) 조사방법

- 양형자료분석관 중 본부 소속 분석관 8인과 자료조사과장, 행정관을 포함한 전체 10명과 수도권(의정부, 인천, 수원)에 근무하는 3명을 포함한 전체 13명으로 조사를 시행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국적인 확산과 방역수칙상 제한으로, 이전 양형자료조사와 달리 검찰청 출장조사 형식이 아닌 판결문만을 대상으로 양형자료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양형정보시스템에 입력

(4) 조사 완료

- 예정된 조사기간 동안 전체 조사대상 5,886건 중 이중경합범 등의 비 해당 사유로 95건을 제외한 5,791건의 양형자료조사를 완료함
- 또한 양형자료조사가 완료된 5,791건 중 통계분석 이전 데이터 확인/점검 과정에서 미수사건, 인정죄명 변경 등의 사유로 271건을 제외한 전체 5,520건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함
- 법원 및 죄명별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현황은 [별지 2, 3]참조

3. 분석 내용

- 성범죄와 관련한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군형법, 형법 중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현재 양형기준 방식으로 분류하여 통계분석 결과를 설명
 - 각 장에는 사건수, 선고내역 등을 포함한 전체 현황, 전체 범죄군의 조사 인자에 대한 빈도표를 제시하였고, 분산분석 및 T-test의 방식을 이용하여 양형인자에 따른 징역형의 형량 차이를 분석하고, 카이제곱 검정 방식을 이용하여 양형인자에 따른 실형·집행유예 여부를 분석함

V. 제13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1. 개요

○ 일시·장소

- 일 시 : 2022. 2. 14.(월) 14:00 ~ 16: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 현황

- 위원장, 상임위원, 운영지원단장
- 자문위원 9인(고학수, 김균미, 김기현, 김정환, 석인선, 안성훈, 양현아, 이경은, 이경원)

2. 회의 내용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자문 의견

3. 자문 의견 요약

- (1) 제1안건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유형 분류 방안

○ 석인선 위원

- 구성요건에 ‘살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체계상 살인범죄 양형기준과 함께 가는 것이 타당함. ‘살해’는 치사와 달리 고의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하나로 묶어 규정함이 양형의 형평에 맞음. 구체적으로는 1-1안(‘아동학대살해 범인 경우’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는 방안)을 지지함

○ 김균미 위원

- 설명자료에서 ‘국민적 공감대’, ‘국민적 공분’이라는 용어가 많이 들어 있어서, 이것을 지나치게 많이 고려하는 것 아닌가 생각임
- 아동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함.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경우와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경우가 형량범위에서 별 차이가 없다면, 아동학대범죄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2안(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방안)을 지지함

○ 이경은 위원

- 아동학대 피해자인 아동은 친권과 양육권이 가해자인 부모가 아니라 국가로 넘어가 있어야 함. 이러한 친권과 양육권 이전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친권자이자 양육권자이기도 한 아동학대 가해자를 온정적으로 바라보게 됨. 피해자인 아동은 가해자 처벌과 무관하게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보호를 해야 하고, 가해자 처벌은 피해자 보호와 무관하게 그 가해자 관련 사항만을 놓고 책임을 물어야 함
- 아동학대살해는 특히 보호대상인 피해 아동이 사망하여 없는 상황임. 따라서 피해 아동 보호는 가해자 처벌에서 고려되지 않아야 함

○ 양현아 위원

-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현대로 올수록 극악한 처벌에서 인도적인 처벌로, 형사적 처벌에서 민사적 제재로 변경해 갈 것’이라고 주장함. 요즘 어느 사건에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면 극형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의를 실현하려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회적 맥락이나 특성을 살펴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그 사회적 맥락이나 특성이 아동학대범죄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이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채워나가야 함. 자녀를 두면 양육의 무한한 책임을 지우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엄벌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복지 제도 구비, 모니터링과 함께 가야 함
- 아동학대살해는 아동학대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중상해, 치사에서 좀 더 나아간 형태라는 점에 주목하여서, 2안(체포·감금·

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방안)을 지지함

○ 김정환 위원

- 처음에는 입법과 양형 모두 시대적 흐름,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여야 하기에 1-2안(살인범죄 양형기준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으로 포섭하는 방안)을 지지하였지만, 현재는 2안(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방안)을 지지함
- 1-2안(살인범죄 양형기준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으로 포섭하는 방안)의 지지를 철회한 이유는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포섭되는 다른 범죄는 모두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만이 규정되어 있는데, 아동학대살해는 7년 이상 유기징역도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것은 입법자가 사형, 무기징역만 선택형으로 둔 범죄들과 불법성이 다르다고 구분한 것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임

(2) 제2안건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양형인자

①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의 정의규정 적정성

○ 석인선 위원

- 정의규정 두 번째 예시인 ‘피해자로부터 먼저 가정폭력 등 범행을 장기간 당하여 범행에 이른 경우’라는 사례를 상정할 수 있을지가 의문임. 아동의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아동의 범죄로 인하여 아동학대가 감경인자로 될 수는 없음
- 정의규정 첫 번째 예시 ‘보호’ 또는 ‘간호’ 중에서는 ‘간호’가 더 타당하다 생각함. 이미 ‘부양’에는 포괄적인 의미가 담기기 때문에, 또 다른 포괄적인 의미인 ‘보호’를 추가할 필요는 없음. 더 나아가 ‘피해자를 부양하던 중’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더 낫겠음

○ 안성훈 위원

- ‘피해자로부터 먼저 가정폭력 등 범행을 장기간 당하여 범행에 이른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동의함. 피해자인 아동의 범행은 그 범행대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사유를 가지고 아동학대를 정당화할 수 없음

○ 고학수 위원

- 괄호 속 문구인 ‘단순 훈육, 교육 등 목적 제외 조항’은 삭제함이 타당. 자칫 이 제외 조항 때문에 이 제외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 양현아 위원

- 괄호 속 문구인 ‘단순 훈육, 교육 등 목적 제외 조항’은 삭제함이 타당
- 정의규정 첫 번째 예시 중 ‘부양 또는 보호’라는 문구는 모호하다고 생각하고, ‘보살핌’이라는 용어로 대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피해자에 대한 보살핌을 장기간 충실히 이행했음에도’로 변경을 제안함

② ‘진지한 반성’의 정의규정 적정성

○ 안성훈 위원

- ‘진지한 반성’ 양형인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위상도 일반양형인자에 불과하므로 큰 영향이 없음. 정의규정도 이 정도로 정하면 충분함

○ 김기현 위원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나 ‘진지한 반성’ 인자는 이 정도로 유지되어도 된다고 생각함

○ 양현아 위원

- 내심의 의사를 법관이 판단하면 자의적이고 정서적인 판단이 됨. ‘진지한 반성’이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한 인자라고 생각함. 피해 회복의 행위 양태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함.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임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의사가 간과된 측면이 많은데, ‘진지한 반성’ 인자가 대표적임. ‘진지한 반성’ 인자는 삭제함이 바람직함

○ 고학수 위원

- 반성문 제출 횟수만으로 감경된다는 비판이 크므로, 가급적 객관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함
- ‘진지한 반성’이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었으면 함. 이 표현만으로도 법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게 됨

○ 석인선 위원

- 객관적인 인자로 답는 것이 좋고, 진지한 반성은 가해자가 이용만 할 수 있는 인자로 생각되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 김균미 위원

- 진지한 반성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인자라 생각함. 피해 회복 부분도 이미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진지한 반성’ 인자는 삭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이경원 위원

- 진지한 반성을 양형인자로 둔다면, 피해자가 ‘진지한 반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3) 제3안건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존치 여부

○ 고학수 위원

- ‘부양가족’에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고 피해자 아닌 다른 가족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안성훈 위원

- 가해자에게 하나의 무기로 사용되었던 것이어서, 이는 당연히 제외되어야 하고, 나아가 처벌불원도 마찬가지로 제외되어야 함

○ 이경원 위원

- 피고인 구금이 남은 사람에 대한 경제적 곤경으로 이어진다는 명제는, 재벌총수의 구금이 기업과 주주, 직원 등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가벼운 처벌을 한다는 명제처럼 거부감이 있음. 삭제에 찬성

○ 양현아 위원

-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벼운 처벌 이유로 제시된 전형적인 사유임. 삭제함이 타당

○ 석인선 위원

- 가해자에게 새로운 학대 기회를 주는 명분에 불과하므로 삭제함이 타당

○ 김기현 위원

- 아동학대 발생으로 개입이 필요한 가정의 20% 내외가 기초수급가정임. 학대가 사실 빈곤한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유가 유지되면 많은 수에서 이 인자가 적용될 것임. 남은 사람의 빈곤은 복지를 확충하여 해결하여야 함

(4) 제4안건: 기타 안건

① 위 안건에 언급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자유로운 말씀

○ 안성훈 위원

- 감경인자 중 처벌불원 인자는 삭제하여야 함. 아동학대범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학대의 책임 있는 보호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벌불원을 고려해서는 안 됨. ‘실질적 피해 회복’도 상정하기 어려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행위는 아동에 대한 의무 이행이지, 이를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볼 수는 없음

○ 김기현 위원

- 아동학대범죄 양형인자에 관한 실무자 의견을 취합하여 본 결과,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별도의 분류 체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음. 정인이 사건에서는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 전문가 6명(소아과 의사 등)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뿌리 깊은 정서가 아이의 말과 몸보다는 보호자의 말을 더 믿어주기 때문임. 아동, 아동학대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맞추어서 별도의 양형기준을 내어야 함
- 아동보호 실무자로서는 강한 처벌을 더 원하고 있음. 아무리 열심히 조사하여 올리더라도 자꾸 가해자들이 풀려나는 결과를 보면서 실망이 큼.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현재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함
- 처벌불원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처벌불원 의사를 받기 위하여

피해 아동을 둘러싼 모든 지인이 연락해 오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실무에서는 학대 상황보다 2차 가해, 즉 재판 과정에서 자꾸 연락해서 탄원서를 써달라고 계속 요청받는 과정에서 자살 생각이 더 많았다고 함. 처벌불원을 둠으로써 부작용이 더 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고, 이것이 벌써부터 아동학대 해결 실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범행 후 구호 후송’을 감경인자로 둔다거나, ‘사체 유기’, ‘사체 손괴’를 가중인자로 둔 것은 모두 환영할 만한 개선임

②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외에, 양형위원회 또는 양형기준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바와 과제에 관한 자유로운 말씀

○ 김기현 위원

- 녹화된 성범죄 피해 아동 진술에 대하여 반대신문 없이는 증거능력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양현아 위원

- 합의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음.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응당 필요하나, 이 의사를 묻는 것이 너무 사적 영역에 두고 있는 점이 큰 문제임. 이 피해자 의사를 묻는 과정이 공적 절차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VI.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7차 공청회 결과 보고

1. 공청회 개요

- 일시 : 2022. 2. 25. 14:00~17:00
- 장소 : 대법원 4층 401호 대회의실
- 방청 : 온라인 생중계(대법원 유튜브 채널)
- 진행 내용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및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발표, 지정토론 및 답변, 방청객 질의·답변

2. 사회자,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 사회자: 손철우 상임위원
- 발표자: 최승원 수석전문위원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지정 토론자
 - 김예원(변호사,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 김혜래(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
 - 김병익(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지정 토론자
 - 최호진(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이천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공청회 지정토론 요지

(1)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

[양형기준 전반]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서 대상범죄를 추가하고 권고형량을 상향한 점, 감경인자의 적용범위를 제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대체적이었음. 다만 장기적으로는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이 반영된

독립적인 아동학대범죄군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김예원 변호사, 김혜래 과장)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기본범죄들이 형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산재해 있고, 그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이 서로 달라 그 전부를 아동학대범죄군으로 포섭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동학대범죄가 포함된 현행 양형기준의 각 범죄군 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용대상의 추가, 양형인자의 신설 또는 수정, 권고 형량범위의 조정 등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제시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답변(이재신 전문위원)이 있었음

[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벌불원’의 적용에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김병익 관장)에 대하여, 향후 양형심리 과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의미에 대하여 신중한 심리가 요청되고, 특히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동 본인의 진실한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할 수 있는 양형심리 방식이 채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보충 의견(홍진영 교수)이 있었음
- 피해아동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벌불원을 감경인자에서 배제하자는 의견(김혜래 과장)에 대하여, ① 아동학대범죄가 기본적으로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인 점, ② 유사형벌체계를 갖춘 ‘13세 미만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도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채택하고 있는 점, ③ 양형위원회에서 처벌불원 정의규정을 엄격하게 정비하고 ‘합의시도 중 피해 야기’의 경우를 ‘처벌불원’에서 제외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불원을 감경인자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답변(최재아 전문위원)이 있었음

[감정인자: 소극 가담]

- 피해사실을 인지한 비가해보호자가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할 경우 아동에게는 행위자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되므로 ‘소극 가담’을 감정인자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고, 방조도 공범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김병익 관장)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① 다수관계자에 의한 범죄에 있어서 현행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위는 공동정범과 교사범에 한정되고, 방조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점, ②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 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하므로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조력이 방조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어서 전형적인 양형인자를 추출해서 기준을 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범죄에 있어서만 방조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대처하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다는 답변(홍진영 교수)이 있었음

[가중인자]

- 가중인자로 ‘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를 추가하자는 의견(김혜래 과장)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현재 아동학대범죄 가해자의 대부분이 보호자이므로 이를 별도 양형인자로 규정할 실익이 그다지 높지 않고, 비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도 사안에 따라서는 보호자에 의한 범행에 비하여 더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를 일률적인 가중요소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최재아 전문위원)이 있었음
- 그밖에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가중인자

에서 취학 여부를 삭제하자는 의견, ‘아동의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추가하자는 의견,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의 정의 규정에서 ‘피해 야기’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자는 의견(이상 김예원 변호사) 등이 있었음

(2)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에 관한 의견

[기본원칙]

- 노역장유치 및 법인 처벌에 대한 양형기준도 설정원칙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천현 선임연구위원)이 있었고, 두 가지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김한울 전문위원)이 있었음

[형종선택원칙]

- 설정되는 양형기준이 벌금형이 징역형과 선택형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기준인지 아니면 병과형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인지, 형종 선택을 고민하게 되는 ‘한계사례’에서 이를 설정하는 기본적인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최호진 교수)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의 ‘원칙’을 정하는 현 단계에서, 병과형 적용 여부를 명시하거나 ‘한계사례’에서의 기본적인 방식 설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답변(백광균 전문위원)이 있었음

[권고 형량범위에 관한 원칙]

- 권고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경제적 자력상태를 행위자/기타인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최호진 교수)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현행 법체계는 피고인의 자력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벌금형을 정하는 점, 일수 벌금제의 경우 형벌의 실효성 등에 있어서 부작용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답변(백광균 전문위원)이 있었음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원칙]

- 벌금형 집행유예 기준의 검토 시기를 특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천현 선임연구위원)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논의가 이제 시작된 점, 실무상 벌금형 집행유예 활용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 집행유예 기준 정립은 향후 운용상황에 따라 필요성을 검토하면 충분하다는 답변(김한울 전문위원)이 있었음

4. 공청회 일반 방청객 의견 요지

(1)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방청인 의견

[처벌불원]

- 아동학대범죄에서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하고, 실질적 피해회복은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처벌불원에 준하는 피해 회복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설명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종래는 아동학대범죄에서 피해아동이나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인정될 수 있었으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공탁한 경우라도 피해아동이나 피해자 측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감경인자로 인정된다는 의미라는 답변(이재신 전문위원)

이 있었음

[범죄 후 구호 후송]

-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후 의식을 잃자 피고인이 자발적인 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결국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후 신고하거나 병원 후송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양형조사 및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식적인 후송에 불과했는지 피해아동을 실질적으로 구호하기 위한 후송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되어야 하고, 형식적인 신고·후송행위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여서는 안된다는 답변(최재아 전문위원)이 있었음

Ⅶ.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1. 개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및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에 관하여 양형위원회규칙 제11조,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 국회,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였고, 법원조직법 제81조의12 제2항,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대상 기준안

- 양형위원회 제114차 회의(2022. 1. 24.)에서 의결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및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2) 조회 기간

- 2022. 1. 28. ~ 2022. 2. 28.

(3) 회신 기관 및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46개(국회 4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6개 기관이 회신
- 각급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법무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변호사회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세이브더칠드런 외 11명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 29개(국회 1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4개 기관이 회신
- 각급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법무부

(4) 회신 자료

- 별첨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 와 같음

2.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회신 의견 및 행정예고 에 대한 의견

가. 각급 법원 : 각 의견 없음

나. 대한변호사협회 : 찬성의견

다. 대한법무사협회 : 달리 제시할 의견이 없음

라. 법무부 : 별도 의견 없음

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은 일반양형인자가 아닌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야 한다.
- (2) 처벌불원인자는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여야 한다.
- (3)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의 범죄행위는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양형인자에서 아예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바. 한국여성변호사회

- (1) 아동학대범죄의 70~80%가 친권자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아동의 보호자인 친권자, 후견인 등의 범행은 가중

인자로 반영하여야 한다.

- (2) 아동학대살해죄 특별양형인자 범행동기인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복, 원한, 증오감'의 대상은 피해아동 뿐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자나 피해자의 주변인 경우도 있으므로, 그 대상을 넓혀야 한다. 또한 체포, 감금죄 등 이를 양형인자로 삼는 대상범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3)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의 일반양형인자 중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인자는 대상범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학여부는 삭제해야 한다.
- (4) 아동의 장애상태를 이용한 범행을 양형가중인자로 추가해야 한다.
- (5) 손해액의 2/3이라는 기준도,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2/3만 배상하여도 감경사유가 되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3로 제한한 것은 의문이다. 합의에 준할 정도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

사. 세이브더칠드런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양형인자 정의 중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 는 수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

아. 행정예고에 대한 개인 의견 (11건)

-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의견
- 처벌불원 양형인자 삭제 의견
-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가중처벌 의견

3.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에 관한 회신 의견

가. 각급 법원 : 각 의견 없음

나. 대한변호사협회 : 찬성의견

다. 대한법무사협회 : 달리 제시할 의견이 없음

라. 법무부 : 별도 의견 없음

※ 별첨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III.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 공개(의결 후 절차)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양형기준의 공개는 양형기준 적용의 투명화, 적정화 및 양형기준 개선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 제6조(양형기준의 공개)

- ①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제20조(양형기준의 효력발생시기)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보게재일 이후의 날을 지정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공개 방법¹⁾

- 관보 게재(전자관보 및 종이관보)
 - 관보게재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게재

4. 추진 일정

- 양형기준 의결 예정 : 2022. 3. 28. 양형위원회 제115차 회의
- 관보 게재 의뢰 : 2022. 4. 초순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 2022. 5. 초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1)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은 관보에 게재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재 예정

IX.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 분야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개선 제안

○ 총론

- 체육계 자체 징계시 감경을 금지하고 있는 스포츠 분야 주요 범죄(▲직무 관련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체육관련 입학비리, ▲폭력·성폭력, ▲승부조작, 편파판정)에 대해 체육계 특수성을 양형기준에 반영하여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 특히 가해자의 체육분야에 있어 업적이나 기여를 이유로 감경하지 않도록 양형기준 개선 필요

○ 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 1) 특별양형인자 중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에 대한 정의에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제2항 상 신고의무자가 교사적 지위에서 자신의 지도·감독·훈육 대상인 선수(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 선수를 말한다. 이하 동일)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및 ② ‘선후배 관계에서 가해자가 선배의 위치에서 후배 선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범한 경우’를 적시
 - 그를 통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뿐만 아니라 성인 선수인 경우도 가중처벌 받도록 할 필요
- 2) 위 1)의 ① 또는 ② 범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된 경우, 일반양형인자로서 가해자가 체육 분야에서 세운 공로나 기여 등을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도록 적시

- 가해자가 체육계 공로가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는 체육계 내 우월적 지위 등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며,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충격의 크기나 영향력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임

- 3) 집행유예 기준 중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제2항 상 신고의무자가 교사적 지위에서 자신의 지도를 받는 선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경우’ 규정

○ 폭력범죄 양형기준 관련

- 1) 일반상해, 특수상해·누범상해, 폭행범죄, 협박범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에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제2항 상 신고의무자가 교사적 지위에서 자신의 지도를 받는 선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경우’ 및 ② ‘선후배 관계에 있는 선수들 간 가해자가 선배의 위치에서 후배 선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
- 2) 위 1)의 ① 또는 ② 범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된 경우, 일반양형인자로서 가해자가 체육 분야에서 세운 공로나 기여 등을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도록 적시
 - 가해자가 체육계 공로가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는 체육계 내 우월적 지위 등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며,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충격의 크기나 영향력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임
- 3) 집행유예 기준 중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제2항 상 신고의무자가 교사적 지위에서 자신의 지

도를 받는 선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경우' 규정

○ 사행성·게임물범죄 중 '불법 스포츠도박 등' 양형기준 관련

- 1)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 행위자에 '해당 경기의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의 주체가 된 선수 및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을 규정
- 2) 해당 범죄의 가해자가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된 경우, 일반양형인자로서 가해자가 체육 분야에서 세운 공로나 기여 등을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도록 적시

※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 분야 범죄 양형기준 개선 관련 제안서」는 [별지 4] 기재와 같음

2.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가. 개요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나. 회신 완료 접수 의견(2022. 2. 15. 까지 총 164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1. 10. 1.(1)	○개별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청
2	2021. 12. 3.(1)	○재활용 관련 업체 처벌요청
3	2021. 12. 4.(1)	○형사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4	2021. 12. 9.(1)	○특정 인터넷 사이트 폐지 요청
5	2021. 12. 13.(1)	○국민 정서와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양형기준 수정, 국회에 법 개정요구를 하여 달라라는 요청
6	2021. 12. 20.(2)	○국민 양형체험프로그램 콘텐츠 추가 및 개선 (양형체험프로그램에 3심 제도 도입 요청, 상해사건 무죄 추가 요청)
7	2021. 12. 15. ~2022. 1. 25.(3)	○개별사건 처벌과 관련한 반복민원

8	2021. 11. 30. ~2022. 2. 7.(86)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청 및 양형기준 강화
9	2022. 1. 26.(1)	○전관예우 변호사 선임으로 감형 받는 사례에 대한 의견
10	2022. 2. 1.(1)	○취지불명
11	2022. 2. 3.(1)	○길고양이 급식소의 의무적 설치 요청
12	2022. 2. 7. ~2022. 2. 14.(65)	○동물보호법위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청 및 양형기준 설정 요청

○ 1번~4번, 9~1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5, 8, 1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6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기존 제작 체험 대상 범죄 외에 체험 대상 범주를 다양화 하는 등의 추가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의 콘텐츠에 관한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양형위원회 운영함에 있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7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반복민원으로 별도의 회신 없이 공람 종결하였습니다.

다. 회신 미완료 접수 의견(2022. 2. 15.까지 접수된 의견 중 미회신 의견, 총 37건)으로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2. 2. 15.(36)	○ 동물보호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처벌 강화
2	2022. 2. 14.(1)	○ 개별사건 처벌과 관련한 반복민원

3.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가. ‘국민신문고 게시판’

- 회신 완료 접수의견(2022. 2. 15.까지 총 5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1. 9. 27.(1)	○개별 법률에 관한 질의 (성범죄 및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2	2021. 11. 22.(1)	○성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3	2021. 12. 27.(1)	○양형참작사유로 정당방위와 심신미약에 대한 의견 제시
4	2021. 12. 29. ~2022. 1. 3.(2)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단속 확대 요청, 중범죄의 경우 형량 강화
5	2022. 1. 28.(1)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6	2022. 2. 7.(1)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1번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는 의결기관으로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 양형기준」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등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

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양형참작사유로서 정당방위와 심신미약에 관한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 및 중범죄의 경우 형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음주단속 강화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6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나. 민원 우편

- 회신 완료 접수의견(2022. 2. 15.까지 총 5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1. 10. 29.(1)	○사기범죄의 양형기준 송부요청, 상고 관련 질의

2	2021. 11. 2. ~2021. 12. 21.(2)	○개별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3	2021. 11. 8.(1)	○국민체육진흥법 관련한 양형기준
4	2021. 12. 13.(1)	○개별사건 판결의 선고형에 대한 질의
5	2022. 1. 6.(1)	○마약류 신고 포상금 제도 및 마약류 단가 시세 표에 대한 질의

○ 1번, 2번,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 양형기준」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등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번에 한하여) 상고와 관련한 귀하의 민원은 그 취지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그 외 개별 사건의 판결 등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미완료 접수 의견(2022. 2. 15.까지 총 3건)으로 빠른 시일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순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2. 1. 28.(1)	○ 개별사건 판결에 대한 질의
2	2022. 1. 28.(1)	○ 공갈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송부
3	2022. 2. 7.(1)	○ 폭력범죄, 교통범죄, 손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별지 1] 신입 전문위원 프로필

	성 명	최 형 준 (崔亨準)
	생년월일	1985. 1. 22.
	출 생 지	서울
	소 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학교	연세대학교
주 요 경 력		
○ 2003	대일외국어 고등학교 졸업	
○ 2006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 2008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0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 2010	해군법무관	
○ 2013	대전지방법원 판사	
○ 20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2020	서울가정법원 판사	
○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성 명	김 한 울 (김한울)
	생년월일	1984. 2. 6.생
	출 생 지	서울
	소 속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출신학교	서울대학교
주 요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 광명 진성고등학교 졸업 ○ 2010.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2012.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 2012. 해군법무관 ○ 2015. 4.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2017. 2.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 ○ 2019. 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2022. 2.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직무대리) 		

[별지 2] 법원별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현황

단위: 명

법원 구분	법원명	선고연도					전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법부	서울중앙	52	63	49	60	43	267
	서울동부	42	20	31	32	26	151
	서울남부	36	36	33	27	44	176
	서울북부	40	38	44	38	30	190
	서울서부	35	31	32	33	41	172
	의정부	45	40	33	37	35	190
	고양	16	17	30	24	27	114
	인천	67	43	55	56	51	272
	부천	26	23	31	23	14	117
	수원	57	60	34	45	60	256
	성남	33	28	23	15	26	125
	여주	12	12	3	6	8	41
	평택	13	18	18	22	13	84
	안산	31	30	34	26	27	148
	춘천	11	11	6	8	6	42
	강릉	6	10	8	13	8	45
	원주	11	5	5	9	12	42
	속초	3	3	4	3	4	17
	영월	3	1	6	6	4	20
	대전	29	49	41	37	38	194
	홍성	9	11	7	6	6	39
	공주	2	4	3	7	1	17
	논산	5	7	4	4	6	26
	서산	6	9	9	10	11	45
	천안	23	19	18	28	24	112
	청주	17	23	29	24	15	108
	충주	7	9	8	4	3	31
	제천	3	7	4	2	0	16
	영동	0	2	2	3	3	10
	대구	37	27	36	44	33	177
	대구서부	12	13	24	25	20	94
	안동	8	14	9	4	4	39
	경주	6	5	4	5	6	26
	포항	11	14	11	7	13	56
	김천	11	15	8	8	11	53

단위: 명

법원 구분	법원명	선고연도					전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상주	3	6	1	5	4	19
	의성	4	2	3	2	1	12
	영덕	3	4	2	1	4	14
	부산	33	35	34	31	28	161
	부산동부	13	15	22	8	12	70
	울산	46	43	26	27	33	175
	창원	25	22	21	19	19	106
	진주	14	8	16	12	5	55
	통영	7	10	4	10	6	37
	밀양	3	3	6	1	1	14
	거창	5	0	3	0	2	10
	광주	43	57	48	47	45	240
	목포	11	15	14	12	11	63
	장흥	0	3	0	2	1	6
	순천	12	19	16	22	16	85
	해남	5	6	7	8	3	29
	전주	12	30	30	17	19	108
	군산	13	11	8	13	9	54
	정읍	5	7	4	5	5	26
	남원	1	4	3	1	2	11
	제주	17	14	17	19	20	87
	안양	14	17	14	14	12	71
	마산	2	6	7	10	12	37
	부산서부	0	7	15	17	9	48
	합계	1,016	1,061	1,017	1,004	952	5,050
군사 법원	국방부	3	1	3		1	8
	육군	92	87	69	52	60	360
	해군	6	10	8	11	14	49
	공군	17	6	13	5	12	53
	합계	118	104	93	68	87	470
전체		1,134	1,165	1,110	1,072	1,039	5,520

[별지 3] 죄명별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현황

단위: 명

구 분	죄 명	전 체
형법	강간	290
	강간상해	115
	강간치상	148
	강제추행	398
	강제추행상해	51
	강제추행치상	130
	미성년자의제강간	5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37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2
	유사강간	189
	유사강간상해	1
	유사강간치상	28
	준강간	314
	준강간치상	48
	준강제추행	315
	준유사강간	185
	합계	2,304
군형법	군인등강간	3
	군인등강간치상	3
	군인등강제추행	236
	군인등유사강간	8
	군인등준강간	8
	군인등준강간치상	1
	군인등준강제추행	41
	군인등준유사강간	4
	합계	304
성폭력처벌법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64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2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03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43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1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상해)	67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53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강간)	26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182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1

단위: 명

구 분	죄 명	전 체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82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58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	66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44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1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51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137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2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42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120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1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26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50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29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81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94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제추행)	57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152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31
	합계	1,966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등)	118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등치상)	29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	309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	113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추행)	123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성행위)	53
	청소년성보호법위반(장애인추행)	1
	청소년성보호법위반(준강간)	89
	청소년성보호법위반(준강제추행)	83
	청소년성보호법위반(준유사성행위)	28
	합계	946
전체		5,520

[별지 4]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 분야 범죄 양형기준 개선 관련 제안서」

스포츠 분야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제안서

2022. 3.

I 제안 배경

□ 그간 체육 정책 방향

- 2019년 1월 빙상계 성폭력 사건, 2020년 7월 철인3종 인권침해 사건, 2021년 1월 프로여자배구 학교폭력 사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한 체육 분야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고,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인권보호 대책 등을 발표하고 이행해옴

< 관련 대책 발표 현황 >

- ① 빙상계 성폭력 사건('19.1월) 계기,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 발표('19.1월)
- ② 철인3종 인권침해 사건('20.7월) 계기, '체육계 인권보호 대책' 발표('20.9월)
- ③ 프로배구 학교폭력 사건('21.1월) 계기,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 발표('21.2월)

< 관련 법 개정 현황 >

- ① 빙상계 성폭력 사건('19.1월) 계기, 국민체육진흥법 1차 개정('20.8.5 시행)
 -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성)폭력 등 체육지도자 제재·자격제한 강화 등
- ② 철인3종 인권침해 사건('20.7월) 계기, 국민체육진흥법 2차 개정('21.2.19 시행)
 - 스포츠윤리센터 권한·기능 강화, 훈련시설 CCTV 설치, 실업팀 표준계약서 도입 등
- ③ 2차 개정 후 추가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3차 개정('21.6.9 시행)
 - 실업팀 운영규정 제정·보고,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및 비위 체육지도자 명단공표 등

- 특히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 조항(제1조)이 개정되어, 지난 1983년부터 약 37년간 유지되어 온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라는 문구가 법에서 삭제되는 등 성적을 위해 폭력이 묵인되던 체육 분야의 성적

지상주의 문화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으며,

-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선수들의 징계를 결정하는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개정하여 제32조 제5항(참고1)에서 ▲직무 관련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체육관련 입학 비리, ▲폭력·성폭력,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네 가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징계 감경, 사면, 복권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 성적중심에서 인권중심의 스포츠 문화 정립 필요

- 그러나 지난 십수년간 일련의 판결들에서(참고 2) 가해자의 체육 분야에서의 ‘공로’, ‘기여’, ‘업적’ 등을 감경요소 또는 참작사유로 삼거나, 체육계 자체 징계에서는 감경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범죄행위에 대해 업적 등을 감경요소로 고려했을뿐만 아니라 그 형의 판결에 있어서도 집행유예, 벌금 등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면 범죄 행위를 상쇄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체육계에 심어주고 그로 인해 성적지상주의 문화, 불공정성 문제가 오히려 조장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이에 일반 국민들의 기대 및 상식에 부합하고 스포츠 인권 침해 문제 방지,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대법원 양형기준 개선을 제안함

<주요 관련 기사>

① ‘업적’은 양형 요소에 없는데... “체육계 기여” 감형(한국일보, '21.12.20)

- '05년부터 '20년까지 폭력, 성폭력, 승부조작,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체육인 관련 1심 판결문 85건 분석 결과, 양형 사유에 ‘지도자·선수·심판으로서의 공로나 업적’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건이 14건
 - 이 가운데 10건은 실형이 아닌 벌금과 집행유예가 선고됨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살인, 뇌물, 성범죄, 등 41개 범죄군의 형량 감경 요소에 공로, 기여, 국위선양 등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 “피고인들이 세운 공(功)이 범죄 피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데 양형 요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박성남 변호사)

② 성적 조작 지시한 교장, 고작 벌금형? (프리티안, '21.6.23)

③ 운동 잘 못 한다고 장애인 선수 상습 폭행한 실업팀 감독 집행유예 (세계일보, '21.6.7)

④ ‘그 코치 봐준 그 판결’ 시리즈 기사(오마이뉴스, '20.9~10월)

- 코치 구타로 뇌손상에 의식불명... 법원은 왜 봐줬나('20.9.23)
- 유독 그곳에 많은 동성간 성폭력... 법원은 관대하기만('20.9.25)
- 기괴한 성범죄에도...가해자 ‘스포츠 인생’ 걱정만 재 판부('20.9.28)
- 초등학생 강제추행 코치, 성실해서 봐준다?('20.9.29)
 - 가해자 기여도에 주목한 판결들
- “맞는 선수도, 심지어 부모도, 메달 위해서라면 맞을 수 있다 생각”(‘20.10.7)
 - 정문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감수성 또한 스포츠계 내부의 시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 “사법부가 체육계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배경과 맥락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았다고 생각” “사건 이면의 맥락..체육계의 집단 우선주의, 견고한 위계질서, 선수들에게 끼치는 보이지 않는 불이익 같은 것들” 충분히 이해해야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Ⅱ 제안 경위

- '19.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사건 판례분석 및 구제방안 연구』 추진
- '21.12월 문체부는 한국일보 관련 보도 이후 법률 전문가 검토 및 자문회의를 거쳐 스포츠 분야 범죄 양형기준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 검토('22.1~2월)

Ⅲ 제안 내용

□ 양형기준 개선 제안의 배경

-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 중 스포츠 분야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 성범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인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의 '신고의무자'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5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사행성·게임물 범죄 중 '불법 스포츠도박 등'과 관련하여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위 기준만으로는 스포츠 분야의 특수성(범죄의 맥

락), 스포츠 인권침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하여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 추가 피해 방지, 경각심 제고,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 스포츠 분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양형기준 개선을 제안함

□ 스포츠 분야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 필요성

- **(위계적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감독, 지도자, 심판, 관장 등 피지도자나 선수 및 업계에 상당한 영향(성적, 진학, 취업, 시합 출전 기회 부여, 국가대표 선정 영향력 등)을 끼칠 수 있는 지위, ▲업계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자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음*

* 『스포츠분야 성폭력/폭력 사건 판례분석 및 구제방안 연구』에 따르면 해당 연구에서 분석한 87건의 성폭력 판례 중 가해자의 위력적 지위(교사적 지위, 선배 등)에 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77건임(약 88.5%)

- **(은폐 가능성)** 체육 중에서도 특히 전문체육 분야의 경우, 취업 알선과 성적에 대한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저항하지 못한다거나 범죄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고, 그에 따라 범죄가 은폐될 가능성이 큼
- **(외부와 단절된 훈련 환경)** 전문체육, 학교체육의 경우 합숙소 등을 활용하여 합숙훈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공용 탈의실 및 샤워실 사용 등 체육시설 환경에 의해 성폭

력·폭력 범죄에 노출되기 쉬움

□ 스포츠 분야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개선 제안

○ 총론

- 체육계 자체 징계시 감경을 금지하고 있는 스포츠 분야 주요 범죄(▲직무 관련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체육관련 입학비리, ▲폭력·성폭력, ▲승부조작, 편파판정)에 대해 체육계 특수성을 양형기준에 반영하여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하며,
- 특히 가해자의 체육분야에 있어 업적이나 기여를 이유로 감경하지 않도록 양형기준 개선 필요

① 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 1) 특별양형인자 중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에 대한 정의에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제2항상 신고의무자가 교사적 지위에서 자신의 지도·감독·훈육 대상인 선수(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 선수를 말한다. 이하 동일)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및 ② '선후배 관계에서 가해자가 선배의 위치에서 후배 선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범한 경우'를 적시
 - 그를 통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뿐만아니라 성인 선수인 경우도 가중처벌 받도록 할 필요
- 2) 위 1)의 ① 또는 ② 범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된 경우, 일반양형인자로서 가해자가 체육 분야에서 세운 공로나 기여 등을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도록 적시

- 가해자가 체육계 공로가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는 체육계 내 우월적 지위 등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며,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충격의 크기나 영향력도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임
- 3) 집행유예 기준 중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제2항 상 신고의무자가 교사적 지위에서 자신의 지도를 받는 선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경우’ 규정

② 폭력범죄 양형기준 관련

- 1) 일반상해, 특수상해·누범상해, 폭행범죄, 협박범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에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제2항 상 신고의무자가 교사적 지위에서 자신의 지도를 받는 선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경우’ 및 ② ‘선후배 관계에 있는 선수들 간 가해자가 선행의 위치에서 후배 선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
- 2) 위 1)의 ① 또는 ② 범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된 경우, 일반양형인자로서 가해자가 체육 분야에서 세운 공로나 기여 등을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도록 적시
 - 가해자가 체육계 공로가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는 체육계 내 우월적 지위 등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며,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충격의 크기나 영향력도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임

- 3) 집행유예 기준 중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제2항 상 신고의무자가 교사적 지위에서 자신의 지도를 받는 선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경우’ 규정

③ 사행성·게임물범죄 중 ‘불법 스포츠도박 등’ 양형기준 관련

- 1)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 행위자에 ‘해당 경기의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의 주체가 된 선수 및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을 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동법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해당 범죄의 가해자가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된 경우, 일반양형인자로서 가해자가 체육 분야에서 세운 공로나 기여 등을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도록 적시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징계 심사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 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6.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 7의2. 인권 침해, 괴롭힘
- 7의3. 선거 관련 비위행위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의3까지에 준하는 사건

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 혐의자의 비위 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 공적(功績), 적극 행정,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할 수 없다.**

- ② 위원회(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및 제7호의2부터 제8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 ③ 위원회(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7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 ④ 위원회는 혐의자가 징계기간 내 동일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2배 이상으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이 중 가장 무거운 혐의에 해당하는 징계 기간 또는 액수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각 혐의에 대하여 합산한 징계의 기간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 제32조(징계의 감경 등)** ①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확정된 징계와 관련하여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별표 4에 따라 감경하거나 사면, 복권할 수 있다. 단, 징계를 확정할 당시 이미 제4항의 사유를 적용한 경우에는 다시 감경하거나 사면, 복권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 ③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실효된 것으로 하며,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징계를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징계를 감경,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 감경 등을 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체육관련 입학 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 ⑥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가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 ⑦ 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제31조제2항 관련)

4. 승부조작, 편파판정(경기 내용 및 결과를 조작하거나,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로 일방에게 유리한 판정 등을 한 경우)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승부조작과 편파판정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② 1백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제명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행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승부조작과 편파판정 행위 발각 이전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 ⑤ 협박 등의 강요에 의하여 행위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6. 폭력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직무 정지기간 중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외 매우 비난할 만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제명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② 폭력 행위가 치료기간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③ 폭력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언어폭력(욕설, 비속어, 조롱, 공격적인 언어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해 모욕, 위협,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극적 표현)	언어폭력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7. 성폭력(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 중 매우 중대한 경우 포함)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행위 ②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③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범행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④ 다수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⑥ 반복적인 경우 ⑦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경우 ⑧ 비난 동기가 중대한 경우(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추행한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제명

8. 성추행 등 행위(“7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의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성추행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추행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9. 성희롱 등 행위(“7항”, “8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등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등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성희롱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희롱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참고2

양형사유로 체육분야 업적이 포함된 형사 판결문 (한국일보에서 언급된 판결)

연 번	사건번호	사건개요 및 판시사항	판단 시 고려 사유(양형 이유 등)	검토 의견
1	부 산 지 법 2013. 2. 8. 선 고 2012고합 621 판결	초·중등학교 축구 부 감독들인 피고 인 갑, 을 등이 프 로축구단 또는 중 학교 축구부의 스 카우트 담당자들 로부터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프로축구단 선수단운영팀장인 피고인 병은 피고 인 갑, 을에게 위 청탁과 함께 돈을 공여하였다고 하 여 <u>배임수재</u> 및 <u>배임증재로</u> 기소 된 사안에서, 피고 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문 p. 8 ○ 공통적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각급 학교 축구부 감독들이 지 도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채 프로축구단 또는 상급학교 축구부 스카우트 담당자들과 소속 학 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키 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서, 신성한 학 교 체육의 전통과 명예를 저해함과 아울러 어 린 학생 선수들조차 상품화하는 그릇된 풍조를 조장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범정에 이 르러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 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학생 선수들의 진학과정에서 해 당 선수와 학부모의 의사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경우는 없었고, 실제 진학한 상급학교들도 축 구선수로서의 활동에 상당히 좋은 환경을 제공 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점, 프로축구단의 우수 선수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해당 구단의 우선 지명권이 인정되는 고등학교[2011년경 고등학 교에 대한 우선지명권의 상한(1년에 4명)조차 폐지된 이상 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 다, 증거기록 620쪽], 심지어는 중학교, 초등학 교로까지 유치경쟁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축구 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일어난 범행으로 서 그 범행 동기나 가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재·증재 사실 자 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u>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유소년 축구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점</u>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다음에서 보는 개별적인 사정, 그 밖에 피고인 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1, 2, 3, 4의 배임 수재 및 배 임증재 성립 여부와 선고 형의 결정에 있어 축구발 전 기여도는 한 가지의 공통적 양형 이유로 작용 하였 으며 , 각 피고인의 개별적 양형 이유(불리한 정상, 유리 한 정상)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각 각 선고

2	부산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3고 합422 판결	농구팀 코치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대한농구협회 심판 중인 피고인 A, B, C, D, E, F에게 <u>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로 기소된 사안</u> 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p>판결문 p. 28-31</p> <p>피고인 A</p> <p>피고인이 64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94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u>우리나라의 열악한 아마추어 농구계의 현실 속에서도 평생을 농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가 있고, 앞으로도 원로로서 농구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u>,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p> <p>피고인 D, E, F</p> <p>다만, 피고인들로서는 1년마다 농구팀의 성적에 따라 재계약을 하는 불안한 지위에 있어 농구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낼 필요가 있고, 만일 심판 등에게 돈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곧바로 다음 시합에서 판정에 불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여 부득이하게 판시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송금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 F은 달리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u>피고인들은 대단히 열악한 우리나라 농구계의 현실 속에서도 농구선수들을 육성함으로써 아마추어 농구계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피고인들이 그간의 지도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훌륭한 농구선수들을 배출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할 여지가 있다고도 보이는 점</u>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법령의 적용 기재와 같이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각 징역형의 선고를 각 유예하기로 한다.</p>	<p>피고인 A, D, E, F의 지위, 업무상 임무 및 그에 따른 의무, 사건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형사처벌 전력, 열악한 아마추어 농구계의 현실 속에서도 농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 및 앞으로의 기여도 (국위선양에 이바지할 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p>
3	부산지방법원 2015. 12. 2 선고 2015고 단6376 판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C소재 D대학교 유도부 감독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인이 아들의 유도 전국대회 1위 수상을 위하여 승부를 조작하여 <u>업</u>	<p>판결문 p. 5</p> <p>아들의 대학 진학을 위하여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상대방 선수의 기권 내지 한판패를 유도하여 대회승부를 조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승부조작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이 제공되지 아니한 점, 승부조작 과정에서 상대방 선수들에게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p>	<p>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승부조작을 한 사안에서 한국중고등학교 유도연맹, D</p>

		<p><u>무방해</u>로 기소된 사안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판결</p>	<p>면서 모든 직에서 사퇴한 점, 아들이 입학한 대학에서 자퇴한 점, <u>피고인이 지난 30여년간 유도계에 몸담으면서 유도계의 발전에 공헌해 온 점</u>,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p>	<p>대학교에 대한 업무방해를 한 점이 인정되나, 승부조작 과정의 구체적 상황 및 피해 발생 여부, 진지한 반성, 유도계의 발전에 공헌해 온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벌금형 선고</p>
4	<p>수원지방법원 2013. 2. 1. 선고 2011노 4977 판결</p>	<p>프로축구 승부조작사건으로(<u>구 국민체육진흥법 제 47조 위반 및 사기방조</u>) 기소된 전 국가대표 김OO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승부조작 사건이 스포츠 토트복권의 배당금을 노리고 그 대상 프로축구경기의 선수들을 매수한 다음 실제로 승부조작을 실행한 것으로서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피고인은 승부조작을 시도</p>	<p>판결문 p. 27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u>당시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국가대표 축구선수로서 국위 선양에 이바지한 점</u>,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 17. 서울고등법원 2012노3014호 사건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비록 피고인의 상고제기로 이 사건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별도로 선고받은 형량을 고려함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스포츠 OO복권의 배당금을 노리고 그 대상 프로축구경기에 참여한 축구선수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매수한 다음 실제로 승부조작을 실행한 것으로서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점, 피고인은 승부조작을 시도하는 전주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후 이를 다른 선수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승부조작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p>	<p>피고인이 국가대표 축구 선수로 국위 선양에 이바지한 점이 하나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서울고등법원 2012노3014호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이 이 사건을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점으로 고려</p>

		<p>하는 전주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후 이를 다른 선수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승부 조작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제1심에서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나, 다만, 피고인이 본건 승부 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판결</p>	<p>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p>	
5	<p>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9. 19. 선고 2018고단1630 판결</p>	<p>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6. 5.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대학교 아이스링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등에서 초·중·고등학생 F 선수들을 지도하였고, 2016. 5.경부터 2018. 1. 18.까지 여자 F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여자 F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지도하였는바, 피해자 G, H, I, J에 대한 <u>상습상해 및 재물손</u></p>	<p>판결문 p. 6 피고인의 범행 대상은 자신이 지도하는 여러 선수들인데 서로의 지위나 나이 등을 볼 때 피해자들이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시기에는 이미 대한 체육회 차원의 폭력예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 등 피고인의 폭력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 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스포츠 현장에서 훈육과 성적향상 독려의 방법으로 물리적 폭력이 동원되어 온 구습이 대물림된 환경에 처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미 병상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되었고 많은 선수나 지도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손괴한 스마트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p>	<p>피고인의 지도 노력 등에 따라 국가대표팀 선수들인 피해자들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기도 한 점이 하나의 참작 사유로 고려</p>

		<p><u>피</u>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한 판결</p>	<p>것인 점, <u>폭력행사를 제외한 피고인의 지도 노력 등에 따라 피해자들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기도 한 점</u>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p>	
6	<p>인천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고단1633 판결</p>	<p>장애인 체육교사인 피고인이 휠체어 없이 거동이 불편한 선수들을 시합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먹, 콤팩스, 나무로 제작한 심판표지판 등을 이용하여 폭행하고, 휠체어에서 내려와 구르게 하고 발로 밟는 등의 학대를 하고, 교사의 도움 없이는 생활까지 불가능한 선수들의 훈련비를 갈취하여 <u>폭행, 공갈, 학대</u>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p>	<p>판결문 p. 10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지휘, 감독하에 있어 저항하기 어려운 선수를 상대로 한 것이고 특히 중증의 장애를 가진 선수에 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u>피고인이 오랜 시간 선수들을 성실히 지도하여 국제대회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등 체육계에 기여한 점</u>, 이 사건으로 교사자격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피해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p>	<p>피고인의 폭행, 공갈, 학대사실은 인정. 다만 피고인이 체육계에 기여한 점, 피해금 중 일부를 반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p>
7	<p>대구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단2402 판결</p>	<p>체육교사, 감독으로 활동한 피고인 A와 복싱선수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피고인 A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 관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p>	<p>판결문 p. 6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제자 등(T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피고인의 제자이다)으로부터 선수계약 체결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과 아울러 피고인을 B를 허위 선수로 등록시켜 I씨 체육회로부터 급여를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는 단순한 소액 재산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수 선발에 있어서 공정을 해치</p>	<p>피고인 A의 형을 결정하는데 있어 불리한 정상, 체육교사로 재직하며 복싱 발전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한 점 등</p>

		받거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여 사 기로 기소된 사안 에서 피고인들에 게 집행유예를 선 고한 판결	<p>는 범죄로서 그 피해가 큰 점</p> <p>유리한 정상: 피해자 W, O, U, V, T과 합의 하였고, 피해자 I시 체육회에도 피해액이 변제 된 점, 2004년 음주운전을 벌금형으로 1회 처 별받은 것 이외에는 범행 전력 없는 점, <u>체육 교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I시 복싱 발전을 위하여 상당한 기여를 하여 온 점</u></p> <p>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받은 징계의 내용(해임) 과 이 사건 재판 결과가 피고인의 직업·신분· 연금수령액에 미칠 영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p> <p>2. 피고인 B</p> <p>범행의 수범,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 니하나, 피해자 I시 체육회에 피해액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스승인 피고인 A의 제의에 의하 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자체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 판 결과가 체육교사를 희망하는 피고인의 직업 및 신분에 미칠 영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p>	의 유리한 정상, 그 밖 에 양형 인 자들이 종합 적으로 고려 되어 집행유 예 선고
8	인천지방법원 2013. 7. 4. 선 고 2012고합 1423 판결	E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 던 피고인이 F고 야구선수인 H을 E대학교 체육특기 생으로 선발해달 라는 업무와 관련 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 하여 <u>배임수재</u> 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한 판결	<p>판결문 p. 2</p> <p>피고인은 국내 명문의 대학교 야구부 감독으 로서 공정한 절차가 요구되는 대학교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을 하면서 특정 학생의 선발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원이 라는 거액의 돈을 수수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청탁에 따라 체육특기생 선발이 이루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대학교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 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 을 수 없다.</p> <p>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1억 원 중 상당한 금액을 전지훈련비용 등 야구부</p>	피 고 인 의 형사처벌 전 력, 반성여 부, 야구계 나 대학 교 육 등에 기 여한 점 등 이 유리한 정 상 으 로 , 그 밖에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이 모두 종합적으로

			<p>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u>피고인이 야구계나 대학 교육 등에 기여한 것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u>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p> <p>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p>	고려되어 징역 1년 3월 선고
9	인천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3고합154 판결	<p>약 30년간 E대학교 야구부 감독 및 총감독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F고 야구선수인 H를 E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 달라는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여 배임수재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역 9월을 선고한 판결</p>	<p>판결문 p. 2</p> <p>이 사건 범행은 야구부 총감독인 피고인이 대학교 체육특기생 선발을 하면서 특정 학생의 선발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수수하고, 실제로 그러한 청탁에 따라 체육특기생 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로 인하여 대학 야구부 체육 특기생 선발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u>피고인이 약 30년간 야구계에 종사하면서 야구계의 발전에 기여한 점이 큰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많은 야구계 종사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u>, 피고인이 지금까지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p>	<p>피고인이 야구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9월 선고</p>
10	인천지방법원 2014. 3. 20. 선고 2013고합829 판결	<p>G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했던 피고인이 H고등학교 야구감독 I으로부터 H고등학교 야구부 3학년 J이 G대학교 체육특기자로 입학하도록 도와 달라는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여 <u>배임수재</u>로 기소</p>	<p>판결문 p. 2</p> <p>피고인은 국내 명문의 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서 공정한 처치가 요구되는 대학교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을 하면서 특정 학생의 선발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천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수수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청탁에 따라 체육특기생 선발이 이루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대학교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p> <p>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3000만 원 대부분을 야구부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p>	<p>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의 사용처,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 처벌 전력, 선처 탄원, 야구계 및 대학 교육 등에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p>

		<p>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p>	<p>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많은 야구계 종사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u>피고인이 야구계나 대학 교육 등에 기여한 것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u>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p> <p>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p>	<p>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p>
--	--	----------------------------	-----------------------------------------------------------------------------------------------------------------------------------------------------------------------------------------------------------------------------------------------------------------------------------------------------------------------	---------------------